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교육학과
김송일

〈요 약〉

지난 1990년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실현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도 급작스러운 변화였으며 큰 놀라움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후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하였던 여러가지의 요인들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간과되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서독의 학교 내에서 실시되었던 통일교육이다. 예컨대 내독 관계부에 의해 추진되거나 또는 각급학교에서 정규과목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된 서독의 통일교육은 독일문제를 다룸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일반 성인들에게 분단의 원인과 오늘날까지의 변화 양상은 물론 동독 및 그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함으로서 자유와 평화속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계발시킴은 물론, 동독과 서독간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개념에서 벗어나 독일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자각의식을 일깨워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독일통일의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통일 독일내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서독의 교훈적 시사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새로운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민족동질성회복을 그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 새로운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게함으로서 북한과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우리의 우월성을 확신케 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력과 비판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3) 새로운 통일교육은 종래와 같은 남북간의 대결 지향주의식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 (4)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통일 이후의 즉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 (5) 새로운 통일교육은 학교내에서 각 교과목간의 내용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호연계속에서 보완적으로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 (6)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또한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통일교육센터의 설립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Zusammenfassung

Im Jahre 1990 ist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verwirklicht worden. Es war wirklich eine plötzliche Veränderung und eine große Überraschung, wenn wir darüber gehört haben. Seitdem hat man viele verschiedene Faktoren genannt, die die Wiedervereinigung von der BRD und der DDR möglich gemacht haben. Aber eine der wichtigen Faktoren, die nicht übersehen werden dürfen, ist die in der BRD durchgeführt worden ist. Beispielsweise hat die von dem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 und von allen Schulen fortdauernd durchgeführte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durch die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einen großen Beitrag dazu geleistet, den deutschen Jugendlichen und Erwachsenen die deutsche Teilung, ihre Ursache und Entwicklung bis heute richtig verständlich zu machen, gleichzeitig ihnen das richtige Einsichtsvermögen und hinreichende Kenntnisse über die DDR und ihre Menschen zu fördern, und den Willen zur Wiedervereinigung in Frieden und Freiheit zu entwickeln. Infolgedessen war es möglich, das Bewußtsein von der Einheit der deutschen Nation wachzuhalten, und aus der ideologischen Gegenüberstellung mit der DDR herauszukommen. In diesem Zusammenhang geht es nicht zu weit, wenn man sagt, daß solche erzieherische Bemühungen gerade die Grundkraft waren, die vorausgesehenen Konflikte und Zwiste in einheitlichem Deutschland auf ein Minimum zu bringen. Angesichts dieser Tatsache scheint es uns sehr bedeutungsvoll, die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in der BRD zu untersuchen. Auf Grund von den dadurch gewonnenen nützlichen Andeutungen läßt sich neue Richtung unserer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folgendermaßen vorzeigen.

(1) Es muß in der neuen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davon ausgehen, das einheitliche Nationalbewußtsein wiederherzustellen.

(2) Die neue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ist in der Praxis daran anzutreiben, unseren Jugendlichen die richtigen und objektiven Kenntnisse über Nordkorea und seine Menschen zu fördern, und dabei ihnen rationale Urteilskraft und kritische Fähigkeit zu entwickeln, damit sie die in Nordkorea bestehenden Probleme selbst erkennen und sich von unserer Überlegenheit überzeugen können.

(3) Die neue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muß aus der bisher durchgeführten Erziehung zur Ideologiekritik sofort herauskommen, die sich nach einfacher Konfrontation zwischen Nord- und Südkorea richtet.

(4) In der neuen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muß es sich darum handeln, das affirmative Zukunftsbild nach der Wiedervereinigung Koreas noch konkreter zu präsentieren.

(5) In der Durchführung der neuen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ist es auch wichtig, inhaltliche Folgerichtigkeit und enge Wechselbeziehung zwischen den jeden Schulfächern zu erhalt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stehen.

(6) Die Erziehung zur Wiedervereinigung für die erwachsene Generation muß mehr verstärkt werden. Dafür scheint es besonders dringend zu sein, das Bildungszentrum zur Wiedervereinigung zu gründen.

I. 머릿말

지난 1989년 11월 19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국경선이 개방되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추진 되어 오던 서독 (Bundesrepublik Deutschland: BRD)과 동독(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DDR)의 통일 (Wiedervereinigung)이 1990년 10월 3일 실현됨으로써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세계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획기적인 대사건으로 주목된 바 있다.

일차적으로 독일의 통일은 1985년 소련에 고프바초프 (Gorbachev)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된 개혁(Perestrokia)과 개방(Glasnost)정책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동서간의 긴장완화분위기 및 동독을 포함한 동부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과감한 정치개혁과 같은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 힘 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독일통일에 보다 유리하게 능동적으로 활용한 서독정부의 정치적 능력과 전후 45년 동안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정치적 발전 및 라인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성장을 통한 거대한 경제력의 축적 또한 동독을 가능케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간과 되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사실은 분단이후 서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확고한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통일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온 통일에 대비한 그들의 교육적 노력과 준비성이다. 즉 학교 내외에서 통일독일의 실현이라는 대전제 속에 청소년들에게 동독과 그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대립개념에서 탈피하여 독일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자각의식을 갖게 하며 통일된 독일에서의 삶에 대비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키 위한 서독의 통일교육은 곧 오늘날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독일내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독일과 우리의 사정이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아직 분단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경우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열망을 독일과 같이 실현시켜 보기 위한 사전준비라는 측면에서 서독이 과거 통일에 대비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통일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독일 통일에 기여하였는가를 먼저 살펴본후 우리의 경우 통일에 대비하여 어떠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서독의 통일교육

일반적으로 서독에서 실시한 바 있는 통일교육이라 함은 각급 학교에서의 정규수업과정을 통하여 독일문제 (Deutsche Frage)¹⁾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독에서 독일문제와

1) 독일문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서독의 언론이나 학술토의에서 또는 학교의 정치수업(Politikunterricht)에서 다루고 있는 독일의 분단, 그 원인과 지난 40여년간의 발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양

관련된 주제영역들이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KMK²⁾에서 동방학(Ostkunde)의 개설을 결정한 이후이며,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실시하게 된것은 1978년 11월 23일 KMK에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교육지침(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을 발표한 이후이다.

KMK의 이 지침³⁾은 서독의 각급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통일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전문은 “독일의 단일성에 대한 의식과 평화와 자유속의 재통일에 대한 의지는 계발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다른 부분과 그들의 주민, 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에 대하여 아는 일은 필수적인 전제이다”⁴⁾라고 시작함으로써 동독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 통일교육의 핵심적 과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기본 입장에 제1장에서는 동지침서가 나오게 된 배경 및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교에서 실시 되는 통일을 위한 교육적 활동의 기준으로서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 및 동서독 관계에 관한 기본조약(Grundvertrag) 등 여러가지 협정이나 규정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학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청소년들은 독일의 분단을 직접 경험한 구세대와 마찬가지로 국토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의식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하여 학교는 독일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종합적 맥락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독일 국가의 단일성에 대한 의식과 평화와 자유속의 자결을 바탕으로한 독일 민족의 통합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그 과업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서독이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일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평화, 자유, 자결속의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있으며, 동시에 동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독일민족의 동질성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 영역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기본 입장에 제3장에서는 실제의 수업상황에서 고려하여야만될 여러가지 유의점들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제시되고 있다.

- 1) 독일문제라 함은 동시에 유럽문제를 의미한다.
- 2) 독일의 분단은 동서간의 갈등관계속에서 파생된 문제임으로 독일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독의 정치적, 사회적 체제비교와 함께 베를린 문제, 오데르-나이세(Oder-Neiße)문제, 동유럽으로 부터 독일인 추방문제, 독일국경문제, 동서독 관계의 문제 즉 내독관계(Innerdeutsches Verhältnis)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에 관하여는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Die deutsche Frage.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r. 203, Bonn 1984, S. 4. 참조.

- 2) 여기서 KMK라 하는 것은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독일 연방공화국 주 교육부장관 상설회의)를 칭한다. 즉, 서독은 베를린과 1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기본법(Grundgesetz) 제30조에 의거 초, 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서독에서는 교육정책에 관한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기 위해 각 주 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상설회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각 주간의 이견조정 및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 3) 이에 관하여는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Wiesbaden 1979, s. 245-256 참조.
- 4) A. a. O., S.246.

평화지향적 정책을 통하여서 달성될 수 있다.

3) 독일의 항구적 분단은 여러가지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4) 민족적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한 것이다.

5)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즉 나치 독재에 의해 야기된 독일의 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든 독일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다.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은 중세 독일인들의 이주이래 공통의 역사, 언어와 문화를 통하여 결속되어 있다.

7) 독일민족은 공동의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국적을 갖고 있다.

8) 동독의 체제와 우리 고유의 사회적 질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척도 하에서 비롯된다.

9) 동독 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는 자명한 권리이자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10) 인권에 대한 요구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11) 동독의 폐쇄정책은 서방측의 영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2) 독일 통일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3) 동독주민들은 그들의 재건 능력에 있어서 점증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14) 독일의 통일은 항상 우리들의 목표이다.

15)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BRD) 이상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된 제3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4)항과 15)항으로써 여기서는 학교 수업에서의 독일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통일이론(Wiedervereinigungslehre)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문제를 학교의 실제 수업장면에서 다루는데 있어서 KMK의 기본입장은 아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통일은 민족적 목표라는 관점으로 부터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미래의 시민들인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시킴으로써 앞으로 독일과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⁵⁾이 이와 같은 목적을 도외시 할 경우 정치교육은 그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독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교육의 중요한 핵심 영역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곧 통일교육임을 시사하고 있다. 1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일이 BRD 이상이라 함은 BRD는 전체 독일이 아니며 그 국민은 전체 독일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즉 독일이라 함은 BRD+DDR을 의미하며, 독일국민이라 함은 동독과 서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실제 수업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의식화 시켜야 하며, 독일인과의 특히 독일의 다른 부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영원한 유대감정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실제 수업 장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 및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에 대한 몇 가지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1) 독일문제는 특히 역사, 사회생활, 공동사회연구, 지리와 독일어(국어)등의 교과목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2) 역사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취급되어야 한다. 독일국가의 생성과 관련된 주제들 : 중세 독일민족의 이주사, 종교개혁, 농민전쟁, 19세기 민족 자유화운동, 1871년의 독일제국 수립, 국가사회주

5)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 또는 국민윤리교과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서, 서독에서는 각 주에 따라 서로 다른 교과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Sozialkunde(사회생활), Gesellschaftslehre(사회론), Politik(정치), Gemeinschaftskunde (공동생활연구)

:독일의 분단 및 독일 동부지역의 상실과 관련된 나치주의의 팽창정책. 상급학년을 위한 전후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점령지역내에서의 독일 분할, 포츠담 협정, 독일 동부 지역의 분할 분리 및 독일인의 추방, BRD와 DDR의 수립, 동서 긴장관계 속에서 양대 군사동맹의 생성 및 그 의의, 60년대말 이래의 긴장완화 노력. 끝으로 인문계 상급반에서는 독일문제에 관한 지식의 확충 및 심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3) 사회생활 교과에서는 동독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 경제적 상황의 특징을 다룬다. 4) 지리교과에서는 독일의 정치적 구조와 각각의 주 특성 및 동독지역, 구 독일 소유의 동부 지역과 베를린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동독과 서독의 경제와 사회의 비교에 있어서는 에네르기 공급, 산업이주, 환경보호, 교통, 관광사업, 유럽공동시장(EC)나 동구공산권 경제상호원조협의회(COMECON)에의 가입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중급 고학년의 독일어 수업에서는 특히 다양한 문학적 예포크에서 독일민족과 관련된 문학적 의미가 논의되어야 한다. 동독의 문학 작품들은 상급과정에서 다루어진다. 6) 그외의 교과들 특히 음악이나 미술 수업에서도 독일문제나 동독의 상황과 관련되는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KMK의 지침은 통일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목표와 과제, 학습의 내용영역은 물론 사태의 분석, 문제의 진술, 중요한 사항의 논리적 입증, 방법론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의 역사, 국어, 지리 및 그밖의 정치교육에 해당되는 교과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물론 각 주는 각기 상이한 학교제도 속에서 독특한 교과운영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 교과목의 이수학년이나 수업시간의 배정 및 구체적 교과내용 등은 서로 다르게 독자적으로 편성될 수 밖에 없으나 서독의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속에서 각급 학교의 5~13학년사이의 정규 수업과정을 통하여 공히 실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이와 같은 서독의 통일 교육은 학생들에게 동독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양독간의 체제 비교와 유럽제국과 양독간의 관계를 분명히 규명케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민족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시키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며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BRD의 체제가 DDR의 체제보다 우월함을 학생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평화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을 재인식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통일관과 확고한 통일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독의 통일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독일의 다른 부분인 분단 동독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공동책임 의식속에서 상호간의 이질성을 최소화 하며 단일 민족으로써의 일체감 형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독일 통일을 위한 내적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III. 학교 이외의 교육

전술한 바와 같이 서독의 각급 학교에서는 KMK에서 제시한 교육지침에 의거 정규 수업과정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러기관 예컨대 교회, 정당, 노조, 민간단체 등에서는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분단 양쪽에 살고 있는 독일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순수한

개인적 관심에 따른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하에서는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한 교육적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동서독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 내독관계부(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의 교육적 활동(1985/1986)을 소개하고자 한다.⁶⁾

첫째로 내독관계부에서는 독일문제의 복잡 다양성과 정보 수요의 점증성을 고려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출판하거나 또는 외부의 저작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판물들을 시민 학생들에게 무료 제공하거나 엽가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화보 및 달력들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1985/86년도에 제작된 출판물들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동독 편람, BRD와 DDR의 비교, 독일정책 안내, 독일정책에 관한 중요한 연설문, 분단국가 상황에 관한 각종 보고서, 동서독간의 협정 및 조약 DDR약사, 베를린 장벽, 동독의거, DDR의 정치와 문화, DDR의 가정 및 청소년, DDR의 이데올로기와 사회발전,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안내, 동독신문의 요약, DDR의 헌법.

둘째로 내독관계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교육사업중의 하나는 동독의 실상황에 관한 필름의 제작 및 대여이다. 동독 또는 서독에서 촬영된 약 150편의 필름이 현재 소장되어 있으며, 신청시 언제나 무료로 대여된다. 소장되어 있는 필름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독일 분단의 원인과 결과, 독일 정책, DDR의 실상, DDR로의 여행 등으로 대별된다. 그 외에도 독일의 전후역사, 내독관계, DDR 주민들의 일상생활 등을 주제로 동독 또는 서독의 방송국에서 방영된바 있는 녹화필름 및 녹음테이프가 준비 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세번째로는 독일 통일, 양독 체제의 비교, 양독 관계의 문제점 및 발전과정, 베를린 문제등을 주제로 하는 각종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학생, 군인, 교사, 언론인, 노조 및 정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각기 관심있는 영역에 대하여 토론을 통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밖에도 교사, 정치교육 전문가, 언론인, 교과서 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회의를 직접 주최하거나 또는 재정적 후원을 함으로써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과 교수법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보완하여 실제 학교수업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의 사전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중요한 또 한가지의 사업으로써 동독 방문의 기회 확대를 들 수 있다. 즉, 15~20세의 청소년들, 10학년 이상의 학생 또는 졸업반, 대학생,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동독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민족 동질성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동독의 실상을 확인시킴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독일 분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취시키고 있다. 물론 동독 또는 동베를린에서의 체재비와 교통비는 무료이다. 아울러 서독의 수도인 본(Bonn)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네번째로는 서독의 시민들 개개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조언 및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는 주로 DDR여행, DDR로의 편지 발송 및 선불 우송, 동독 체제시 화폐교환,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문제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여 기타 동독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도서관 안내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분단 독일의 통합을 가능케 하며 동시에 통합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실시되었던 서독의 통일교육의 중요한 내용영역은 독일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의 핵심과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일 분단의 문제를 동서간의 갈등 및 냉전 체제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동독의 실상과 양독관계에 대한 정확

6)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 Informationsangebot zur deutschen Frage, Neuauflage 1985/86, Köln 1986 참조.

한 이해증진을 통하여 독일은 비록 현재 양분되어 있으나 양쪽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동 경험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독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자각케 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곧 일 민족 이 국가(Zwei Staaten einer Nation)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분단 여건속에서 민족의 이질화 현상을 최소화 시켜보자는 서독의 독일 민족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서 이와 같은 서독의 통일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1981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⁷⁾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67%는 “DDR의 주민들은 독일인이며 나는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는 별로 없으나 그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7%는 “DDR의 주민들은 우리와 똑 같은 독일인이며 나는 그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두 번 또는 그 이상 동독을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는 곧 동족의식을 느끼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가능케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친척 친지의 재회는 물론 문화, 종교, 체육행사의 교류를 통한 만남의 기회가 보다 확충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양독간에 체결된 통행협정(Verkehrsvertrag)⁸⁾과 같은 정치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서독의 경우 청소년들은 동독의 정치 체제구조나 이데올로기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므로 동독 주민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직업선택, 여가선용, 가정, 사회조직, 선거등의 주체들을 다루면서 동독체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특수성을 취급한 후 양독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지적⁹⁾은 우리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관심영역을 파악해본 후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적용시켜 볼 만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로 서독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BRD와 DDR의 체제 비교는 양독관계를 논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 “양독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의 차이점이나 모순점만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통일의 가능성이 경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 통일이나 민족과 같은 문제 영역은 가급적 적게 취급하고 “독자적인 국가로서 DDR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부여”와 함께 “분단된 독일의 완전한 분리와 다양한 형태속의 통일 중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하며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 하는 것”¹⁰⁾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은 우리의 수업 현장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으로 보여진다.

종합적으로 한국적인 상황에서 볼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한 단순한 평화공존의 추구가 아니라 한걸음 더 발전하여 한반도에서 자유로운 민족적 합의를 통한 평화적 민족 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면 이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내적 분위기를 성숙시키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통일 독일내에서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 혼란과 정신적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서독의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었던 통일교육의 모델과 경험은 우리의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교훈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연 어떤 교육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가? 실현가능한 교육적 방안이 구체화 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하여는 통일교육을 위한

7) Barbara Hille/ Walter Jaide: Einstellungen Jugendlicher zur deutschen Frage, i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Die Frage nach der deutschen Identität, Bonn 1985, S. 38에서 재인용.

8) 1972년 10월 17일 양독간에 체결.

9) Babara Hille/Walter Jaide: A. a. O., S. 44.

10) Peter Müller/Horst Schlausch: Lehrplananalyse zur deutschen Frage, i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n Bildung (Hrsg.): Die Frage nach der deutschen Identität, a. a. O., S. 359.

환경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양독간의 관계 개선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Ⅳ. 양독간의 관계 개선

서독은 독자적인 정부 수립 이후 아데나워(Konrad Adenauer)¹¹⁾를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동독은 일당 독재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반면 서독은 자유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임으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서독만이 독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합법정부(Alleinvertretungsanspruch)라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였다.¹²⁾ 이와 같은 동독 불인정 원칙과 함께 서독 정부는 1955년 9월 23일 할슈타인 원칙(Hallstein-Doktrin)을 발표하였다. 이는 동독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국가는 동독을 국가로서 승인하는 즉 서독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국가로 간주되며, 따라서 서독 정부는 이런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강경한 외교 정책으로서 당시 서독 외무부 차관이었던 할슈타인이 발표한 서독 정부 성명을 말한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제 정세는 미·소를 양축으로 하는 기존의 냉전 체제에서 탈피하여 동서 화해를 추구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어 갔다. 이와 같은 국제적 해빙 분위기는 곧 동서독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어 적대적 대결로부터 평화 공존 체제로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양독간의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동독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동독과 보다 구체적이며 집중적인 접촉을 가능케함으로써 통일 논의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서독측의 의도가 작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1969년 10월 28일 당시 서독의 수상이었던 브란트(Willy Brandt)¹³⁾는 새로운 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발표하였다. 이속에서 브란트는 “가령 독일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다”¹⁴⁾라고 언급하여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었다. 아울러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서독의 동독 및 대 동부유럽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시사하였다. 새로운 동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서독측의 대동독정책의 방향전환은 서독이 동독을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실상 일민족 이국가(Zwei Staaten einer Nation)의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동독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 개선함과 아울러 관계 정상화를 기하고 양독간의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 정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단안으로서 높이 평가된다.

또한 1972년 6월 3일 베를린을 분할 점령하고 있는 미·영·불·소의 4대강국은 베를린에 관한 4대국 협정(Viermächte-Abkommen über Berlin)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①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었으며 ②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연결 유지 및 개발 ③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방문등이 가능하게 되었다.¹⁵⁾ 이어서 1972년 10월 17일 부터 발효된 양

11) CDU(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독일기독교민주당) 소속.
 12) Helmut M. Müller : Schlaglichter der deutschen Geschichte, Lizenzausgabe für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1987, S. 354 참조.
 13) SPD(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독일사회민주당) 소속.
 14) Helmut M. Müller : A.a.O., S.392.
 15)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Berlin,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r. 181.Bonn 1983, S.29 참조.

독간의 통행 협정(Verkehrsvertrag)¹⁶⁾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고 있어 친척 및 친지의 재회는 물론 문화, 종교, 체육행사의 교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상호 개방 체제 속에서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기함은 물론 양독간의 긴장 완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내외 문제에 있어서 상대국의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가시적이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대국의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적인 양독의 관계 개선 정책은 더욱 발전되어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 관계에 관한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이 체결되었으며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호혜평등을 기초로 상호간의 선린 관계 건설, ② 국내외 문제에 있어서 상대국의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③ 유럽의 평화를 위해 진력, ④ 관계 정상화 및 여러 영역에서의 공동 작업을 위한 협정 체결, ⑤ 상주 대표 교환¹⁷⁾ 등이다.

이 기본 조약을 바탕으로 동독과 서독간에는 수 많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었음은 물론, 양독은 1973년 9월 18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1975년 12월 18일에는 상주 대표를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서독측의 노력은 유럽 내에 상존하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서독의 국제 외교상의 영향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또한 이 기본 조약은 동서독 양국간의 폭넓은 직접 교류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며 민족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분단 국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양독간의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기초하여 서독의 전기한 바와 같은 통일교육은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남북간의 관계 상황은 동서독과 비교해 볼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요원한 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통일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현재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통일을 위한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V. 통일에 대비한 교육방향 모색

1. 우리의 통일에 대비한 교육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40여년 이상 서로 다른 역사관, 국가관, 인간관을 갖고 있는 체제에서 살고 있던 이산가족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모든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으나 언젠가는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의 민족이라는 당위적 사실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즉, 북한주민들은 더이상 '공산주의적 괴물'이 아니며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혈연공동체이며, 같은 민족문화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통일실현을 위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물론 통일이후에 각기 떨어져 지내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작업으로 간주되어 진다.

2. 통일에 대비한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게 함으로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우리의 우월성을 확신케 할 수 있는 판단력과 비판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추

16) Helmut M Müller : A.a.O., S.393.

17) Helmut M. Müller, : A.a.O., S.393~394 참조.

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교과서에 의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유로운 복한 TV시청과 라디오의 청취, 신문구독 등의 방법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오늘의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KBS-TV의 남북의 창, MBC-TV의 통일전망대와 같은 프로그램의 활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대체로 밤 늦은 시간에 방영됨을 감안할때 VCR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방송(EBS)에서도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종래의 대결 지향주의 식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으로 부터의 탈피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는 과거의 반공교육, 승공교육, 안보교육등에서 나타났던 북한에 대한 부정일변도의 감정적 반공 구호를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대결 지향적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비판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최근 소련과 동부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공산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허구성과 모순점에 대한 비판적 근거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낙후성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안목을 전이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월주의 또는 체제 경쟁적 교육의 수단으로 보다는 화해와 상호 이해를 기초로 한 통일국가의 건설이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통일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이후의 즉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즉, 감정적 호소에 의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통일이 될 경우 기대되는 경제적 준비확충의 불필요성, 보다 고도의 경제성장의 가능성, 사회체제의 안정성, 이산가족의 합류 등과 같은 가시적 효과 측면을 이해시킴으로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의 증진과 자연스러운 공감대 형성이 전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고 수단을 강구하여 통일을 조기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대 전제인 것이다.

5.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어떤 특정교과에만 국한되어 실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통일교육은 각급학교에서 관련교과 예컨대 도덕, 윤리, 사회, 역사, 지리 등은 물론 각 교과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호 연계속에서 보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실제 수업현장에서 다루어져야 될 주제 영역과 내용의 선정 및 체계적 편성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통일교육지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6. 학교이외의 통일교육 또한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통일원이나 또는 민간 기구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휴전선 견학 기회의 확대, 북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배포,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개발 및 배포, 북한으로 부터의 귀순자와의 대화 기회의 확대 등은 통일실현을 위한 그리고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의 효과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북한의 사회 현실과 변화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통일교육 센터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통일교육의 활성

화와 심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Literaturverzeichnis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 Informationsangebot zur deutschen Frage, Neuauflage 1985/86, Bonn 1986.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 Berlin.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181 Bonn 1983.
- Dies.(Hrsg.) : Die deutsche Frage.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r.203, Bonn 1984.
- Dies.(Hrsg.) : Die Frage nach der deutschen Identität, Bonn 1985.
-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Wiesbaden 1979.
- Müller, Helmut M. : Schlaglichter der deutschen Geschichte, Lizenzausgabe für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1987.